

2023학년도 1학기 학력진단평가 2학년 형법 [OX형] 답안

출 제 자 : 홍승희

시험일시 : 2023. 03. 03.(금) 13:30 ~ 14:50

번호	정답	출처	[근거적시 요] 이유
1	X	21년(10회) 변시 - 문10.㉔	대결 1999.4.13., 자 99초76; 대판 2018.2.8. 2016도16757
2	X	20년 6모 - 문1 ㉔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고 보아야(대판 1997.1.24., 96도1731)
3	0	20년 10모 - 문1.ㄴ. 변형	대판 1977.6.28., 77도251 “예비, 음모는 미수범의 경우와 달라서 그 형을 따로 정하여 놓지 아니한 이상 처벌할 형을 함께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동법 제5조 4항의 입법취지가 동법 제5조 1항의 예비, 음모죄를 처벌한 의도이었다 할지라도 그 예비, 음모의 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본범이나 미수범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해석함은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다.”
4	0	21년(10회) 변시 - 문 14. ㄷ.	대판 2015.11.12., 2015도6809 전합
5	X	22년 10모 - 문1. ㄴ	[근거제시요] 진정부작위범은 일정한 부작위가 있으면 바로 기수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미수는 불가능. 하지만 형법상 퇴거불응죄(§319㉔)와 집합명령위반죄(§145㉔)는 진정부작위범이면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예외에 해당
6	0	22년(11회) 변시 - 문1. ㄴ.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작위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보증인적 지위에 있지 않은 자도 교사범이 되지만,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은 가담형태가 부작위이므로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 만이 가능하다
7	X	20년(9회) 변시 - 문2. ㉔	대판 2007.9.28., 2007도606 전합
8	0	20년(9회) 변시 - 문2. ㉔	대판 1991.10.11., 91도1656
9	0	19년(8회) 변시 - 문1. ㄴ.	대판 2018.1.24., 2017도11408; 2018.5.11., 2017도9146
10	X	19년(8회) 변시 - 문3. ㄷ.	[근거제시요]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으므로 기습추행도 가능하며, 단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 (대판 2015.9.10., 2015도6980
11	X	19년(8회) 변시 - 문3. ㄴ.	기본범죄(상해) 이후 행위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소위 ‘개괄적 과실’),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다툼이 있으나, 판례(대판 1994.11.4., 94도2361)는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결과적 가중범 성립을 긍정함.
12	X	22년 10모 - 문2 ㉔	[근거제시요]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판례입장인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상해미수죄와 과실재물손괴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되어야 하나, 재물손괴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 ‘상해미수죄’로만 처벌됨
13	0	22년 8모 - 문10. ㉔	대판 1999.4.9., 99도519

14	0	22년(11회) 변시 - 문4.㉓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하여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소위 “객관적 불법론”에 따를 때 맞는 설명이다.
15	0	20년 8모 - 문3.ㄴ.	긴급피난에서 피난행위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난행위의 상당성은 보충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균형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16	0	19년(8회) 변시 - 문 6. ㉔	대판 1983.11.22., 83도2224
17	X	22년(11회) 변시 - 문 3. ㄱ.	[근거제시요] 대판 2008.12.11., 2008도9606 “피해자의 승낙은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18	X	19년(8회) 변시 - 문11. ㉑	[근거제시요] 행위자의 성격책임에서 책임근거를 찾는 입장은 ‘사회적 책임론’임. ‘도의적 책임론’은 의사자유를 가진 행위자가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법(범죄)행위를 한데 대한 도의적·윤리적 비난에 책임의 근거가 있다고 함.
19	X	20년 10모 - 문 6. ㉕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간의 불가분적 연관성설(예외설/책임모델설)은 책임의 근거만 원인행위로 앞당기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는 객관적 구성요건의 정형성이 드러나는 실행행위 개시시로 본다.
20	X	22년 8모 - 문5. ㉕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임 (대판 2018.11.1., 2016도10912 전합)
21	0	22년(11회) 변시 - 문7. ㉑	대판 2018.9.13., 2018도7658
22	X	19년(8회) 변시 - 문5.ㄴ	미수범은 범죄실행에 대한 고의를 가진 자를 전제로 처벌가능성을 두고 있는 것임. 따라서 처음부터 결과발생이 불가능함을 인식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수범이 성립하지 않음
23	X	20년 10모 - 문7. ㉑	객관설에 따르더라도, 乙에게 자의성은 인정됨.
24	0	21년(10회) 변시 - 문 7. ㄱ	대판 1984.12.26., 82도1373
25	0	22년(11회) 변시 - 문37.	대판 1987. 12. 22., 선고, 87도1699,
26	0		대판 2014.1.16., 선고, 2013도6969
27	X	20년(9회) 변시 - 문1. ㄷ.	대판 2018.8.1., 2015도20396
28	X	21년(10회) 변시 - 문 18. ㉓	불법을 조각하는 신분(의사, 변호사, 재물소유자 등)이 불법이 성립되는 비신분자의 행위에 가담한 경우, 신분자인 공범자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공범이 성립됨. 따라서 甲은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이 성립함(대판 86도749)
29	X	21년 10모 - 문9. ㉔	대판 2019.4.18., 2017도14609 전합 <표준 163>
30	0	22년 6모 - 문1.ㄱ.	대판 2021.1.21., 2018도5475 전합
31	0	18년(7회) 변시 - 문15. ㉑	대판 1990.2.13., 89도1406
32	0	18년(7회) 변시 - 문16. ㉒	대판 2003.1.10., 2002도4380
33	X	22년 8모 - 문 6. ㉓	대판 2006.9.14., 2004도6432

34	0	21년 10모 - 문11. ㄱ.	형법개정으로 형법 제305조의3(예비,음모)가 신설
35	X	21년 10모 - 문11. ㄴ.	대판 2012.7.26., 2011도8805 <표준 225>
36	X	22년 6모 - 문3. ㄴ.	대판 2018.6.15., 2018도4200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37	0	22년 6모 - 문14. ⑤	대판 2020.11.19., 2020도5813 전합
38	0	18년(7회) 변시 - 문18. ④	대판 2015.10.15., 2015도8169
39	0	19년(8회) 변시 - 문4. ㄴ.	“피고인이 그것을 본가의 소유물로 오신하였다 ... 그 오신은 형의 면제 사유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범죄의 구성요건사실에 관한 형법 제1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대판 1966.6.28., 66도104)
40	0	19년(8회) 변시 - 문18. ㄷ.	대판 1999.9.17., 98도2036
41	X	21년(10회) 변시 - 문 8. ㄱ	대판 2020.4.29., 2014도9907)
42	0	18년(7회) 변시 - 문17. ③	대판 2014.9.26., 2014도8076; 75도781
43	X	20년(9회) 변시 - 문5. ④	[근거제시요] 대판 2004.4.16., 2004도353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u>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u>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도 없었으므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 결과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
44	X	21년 10모 - 문16. ①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구성요건에서 사람은 범인 이외의 타인을 의미함. 따라서 범인이 혼자 사는 건조물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객체가 되지 않으며,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함. 이때 자기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 등이라도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되므로(176조), 사안에서 타인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166조 ①)이 성립함
45	0	21년 8모 - 문15 ④	대판 2014.7.24., 2014도6206
46	X	21년 8모 - 문17. ⑤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있음
47	X	22년(11회) 변시 - 문20. ③	대판 2008.2.14., 2005도4202
48	0	21년 6모 - 문18. ③	대판 2017.5.30., 2015도15398
49	X	21년 10모 - 문18. ①	대판 2021.1.28., 2020도2642 “ <u>형법 제155조 제1항</u> 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여기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

			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50	0	20년 6모 - 문17.□	대판 2018.2.13., 2014도11441
51	0	21년 8모 - 문18 ⑤	대판 1995..9.29, 94도2608
52	X	22년(11회) 변시 - 문15	대판 2011.4.14., 2011도300, 2011감도5
53	0		대판 2019.12.12., 2018도2560
54	X		[근거제시요] 비동거 친족은 친고죄로 취급됨(형법 제328조 제2항)
55	X	21년(10회) 변시 - 문 9.	대판 2003.7.25., 2003도2252 “명의인을 기망하여 위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은 이상, 이로써 송금받은 돈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게 되어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후 편취금을 인출하지 않고 있던 중 명의인이 이를 인출하여 갔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성립 후의 사정일 뿐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56	0		대판 2017.5.31., 2017도3894
57	0		대판 2010.12.9., 2010도6256
58	0	20년(9회) 변시 - 문 23.	대판 2015.10.29., 2015도12838
59	0		대판 1994.12.22., 94도2528
60	X	19년(8회) 변시 - 문9. ②	“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함에 있어서는 그 받은 뇌물 자체를 몰수하여야 하고, 그 뇌물의 가액에서 위와 같은 지출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상당한 이익만을 몰수·추징할 것은 아니다.”(대판 1999.10.8., 99도1638)